

미주지역 인권보장을 위한 미주인권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소고*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의 아시아지역 인권보장을 위한 비전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 -

Reflections on the role of the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Latin America

- Implications for the vision and role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Asia -

유 은 정(Yoo, Eun Jung)**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successful management of research institute of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would provide foundation for the Asian Human Rights System in future. Moreover, the research of the institute will be able to prepare such visions for the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AACA), in whic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akes an affirmative and leading role, that the Association should authorize and support the research institute with adequate mandate, goals, statue, and sources so that it may work out for building and encouraging Asian Human Rights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sian Human Rights Court. Although the research institute is a branch of AACA and also will be organized and govern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t should be independent or autonomous enough institute to perform research and make meaningful research proposals and reports to encourage human rights protections in each country, to provide necessary education and training, and to make accountable the persons and governments who are in charge of human rights protection, or those who violate human rights in Asian countries, for the time being as there is no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in Asia.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takes a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human rights system in other regions, in particular, the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which is the institute charged with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researching and educating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system. Accordingly, it would contribute to give guidance for the functions and mandates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AACA in Korea that will eventually become a cornerstone for building Asian Human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1503-0133).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헌법재판소 공동학술대회,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 사무국 설립·운영방안의 모색”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Rights System.

Key words: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Constitution, Human Rights, Constitutional Court

I. 들어가며

언제, 그리고 왜 특정 국가가 글로벌 수준에서의 인권신장과 이행을 위해 나서는 것인가?¹⁾ 기본적 인권은 일차적으로 개별 국가의 정부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많고, 또 우선적인 인권의 보호자는 바로 개별 국가이어야 한다.²⁾ 그러나 국가에 의한, 또는 국가의 묵인 또는 무능력에 의한 사인에 의한 인권 침해는 그 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해당 지역과 세계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³⁾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국제적, 지역적 인권보장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성과를 맺고 있다. 다만 미주, 아프리카, 유럽대륙에는 지역적 인권보장제도가 설립되었으나, 아직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인권보장체제는 구축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1986년 창설되었고,⁴⁾ 아시아 13개국의 최고재판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⁵⁾의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존재한다.⁶⁾

비록 각 헌법재판기관의 관할권은 그 나라에 국한되지만, 각 헌법재판기관은 개인의 인권

1) Alison Brysk, 『Global Good Samaritans? Human Rights Foreign Policy in Costa Rica』, 『Global Governance』 Issue 11, 2005, 445-446쪽.

2) 박경철·이상경,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 현황과 인권보장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5, 51쪽.

3) 박경철·이상경, 위의 글, 51쪽.

4) 박진완, 국제적 헌법주의의 실현형태로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 유럽헌법연구 15호, 2014.6, 134면. <http://www.humanrights.asia/> (최종검색: 2017.2.27.)

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에는 현재 14개 국가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 유사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6) 상세한 내용은 박한철, 『아시아 지역의 기본권 신장과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박영사, 2016, 477쪽 이하; 박경철, 이상경, 앞의 글, 52면 이하. 2012년 창설된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은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과 확립, 아시아인들의 자유와 인권신장,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시대정신 및 역사발전에 맞는 헌법재판제도와 헌법해석의 모색, 모든 인간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서울선언을 선포하였다. 박경철·이상경, 앞의 글, 73쪽.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하여는 박경철·이상경, 같은 글, 52쪽 이하 참조. 또한 아·태지역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논의는 홍성필, 아·태지역 인권기구의 설립: 전망과 과제,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제2권 (1998) 참고.

보호를 위한 국가 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⁷⁾ 특히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 문화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의 합의가 가능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집단학살금지, 아동인권보장 등)을 보장하는 아시아인권에 관한 협약과 이의 실효적인 이행을 담보할 인권재판소의 설립논의에 있어서, 사법기관으로서의 한계는 있으나 상당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의 연합은 아시아 지역, 또는 적어도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나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권보장체제의 설립을 논하기에 적절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⁸⁾ 미주인권위원회나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연구기능을 수행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를 위한 연구로써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며,⁹⁾ 미주체제의 경우에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 범위적인 인권에 관련한 학문적 연구는 미주인권사무국(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에서 수행한다. 물론 아시아지역인권보장체제의 설립을 위하여, 각국의 시민단체,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각 종, 각 급의 정부가 상호 교류, 연구하며, 이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함은 당연하다.¹⁰⁾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1900년대 후반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법원의 독립 및 권한 강화 특히 헌법재판의 발전을 통해 가능 할 수 있었다.¹¹⁾ 또한 국제인권협약 또는 지역인권협약의 실효적인 보장은 그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법원에서 개인이 그러한 협약을 원용할 수 있게 하는 것¹²⁾, 즉 국내법 질서에서 국제인권법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 7) 박한철, 앞의 글, 463쪽. 또한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소”, 박경철·이상경, 앞의 글, 73면.
- 8)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은 인권을 헌법적으로 수용한 기본권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제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준일, 아시아 지역인권보장체계 설립 방안 - 유럽인권재판소 모델의 아시아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 -,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2호, 2015.8. 108면. 또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헌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와 인권침해의 조사, 구제를 임무로 하는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국가들이 각 인권보호기관들의 축적된 사례와 제도 등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인권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적 지역 인권체제의 설립으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철, 이상경, 앞의 글 76면 참고.
- 9) 아시아지역인권체제를 위한 인권연구사무국은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가능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최고의 국가기구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구제에 관련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미주인권위원회나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연구기능을 수행하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를 위한 연구로써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뿐이다.
- 10) 박경철, 이상경, 86-87면. 또한 지역적 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하여는 홍성필, 앞의 글, 351면 이하 참고.
- 11) 음선필,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563면.
- 12) 박진완, 앞의 글, 159면. 미주인권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인이 미주인권협약을 국내법원에서 원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다. Gardbaum, Stephen Gardbaum,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in Ruling the World? Co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Jeffrey L. Dunoff & Joel P. Trachtman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47면; 박진완, 160면 재인용. 미주인권협약 체결국의 헌법규정과 미주인권협약과의 관계는 헌

써 가능하게 된다.¹³⁾ 따라서 아시아인권보장체제의 설립을 통한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아시아 지역 인권의 신장 및 평화라는 궁극적인 비전을 염두에 두면서,¹⁴⁾ 그 길목에 있어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에 설립된 상설연구사무국¹⁵⁾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지역인권보장체제 중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 전통, 식민지 경험, 정치 및 경제, 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진 국가들이 존재하는 미주지역인권체제(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이하 IAHRS)의 인권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인 미주인권사무국에 대하여 검토한다.¹⁶⁾ 미주인권사무국은 미주인권재판소에서 설립하였으나 독립, 자치적 기관으로 운영되는 순수한 학문적 성격의 교육, 연구기관이며, 미주인권체제 기관¹⁷⁾ 중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설치된 연구사무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¹⁸⁾¹⁹⁾

법 우위에 있는 지위(콜롬비아,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헌법과 동등한 지위(아르헨티나, 파나마, 페루, 볼리비아), 법률우위의 지위(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법률과 동등한 지위(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우루과이)로 평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형석, 미주인권협약상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에 관한 연구, 240-242면.

13)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89헌가106 참고.

14) 박한철, 앞의 글, 478쪽.

15) 현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 기사입력 : 2017.01.03 10:35 (최종수정 2017.01.03 10:35)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0103102827883745301_12 (검색일: 2017.1.24)

16) 미주인권체제 하의 미주인권위원회는 미주기구의 지위와 미주인권협약상의 지위를 보유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청구에 대한 심사 등 준사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미주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도 수행하지만, 미주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연구는 개별사건과 관련된 조사, 국가별인권상황에 관한 조사, 주제별 연구 등이다.

17) 미주인권사무국은 미주인권체제(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의 기관이지만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지위를 보유하지는 않는다.

18)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은 각 국의 헌법을 바탕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기본적으로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미주지역의 인권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미주인권체제의 인권사무국과는 그 지위와 기능을 대등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에서도 연구사무국의 설립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글과 연구사무국의 출범식에서 했던 축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헌법재판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지역 전체의 인권존중과 평화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아시아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의 비전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02/20170102003066.html> (검색일: 2017.3.31)

19) 미주인권사무국의 기능 및 인권보장과 관련한 미주인권사무국에 대한 평가는 주로 미주인권사무국 및 미주기구 웹사이트, 미주인권사무국이 발간한 전략계획 및 평가서를 통한 여러 교육과정 및 연구사업 자료, 미주인권사무국의 연구보고서, 그 밖에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그 밖에 미주국가들과의 협력, 활동사항 등에 대한 자료,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II.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의 설립 및 기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는 규약 제22조를 개정하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무국은 총회사무국과 상설사무국으로 구성되는데 공동사무국 형태로 구축되는 상설사무국 중 행정사무국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하고, 연구사무국은 대한민국에, 인적자원개발센터는 터키에 위치하게 되었다. 상설사무국의 주요 기능은 특정 회원기관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제외한 연합 활동 기획 및 조율, 회원기관 간 경험 공유의 체계화,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수행, 입헌주의 이념의 확산, 헌법재판기관 활동의 홍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²⁰⁾ 그 중 우리나라에 위치하는 연구사무국이 담당할 기능은 회원기관간 및 외부기관간의 공동연구활동 기획, 수행 및 조율, 연구 수행 및 학술연구활동제안, 연구성과를 모아서 국제학술저널 발행, 회원기관 기본정보 및 주요판례 DB 구축 및 운영,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입헌주의 증진을 위한 연구활동 수행, 연구주제에 관한 재판관급 및 연구관(researcher)급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개최 등이다.²¹⁾ 규약 제22조 제5항²²⁾은 연구사무국을 포함하는 상설사무국의 구성, 조직, 기능, 그리고 본조 4항²³⁾에 규정된 주요 목적에 부합하는 상시 목표, 입지 및 재원조달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상설사무국은 이사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²⁴⁾ 규약 세부사항에 따르면 연구사무국의 대표는 연구사무국을 유치, 운영하는 회원기관 즉, 헌법재판소가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추인되며, 상설사무국의 구조 및 인력구성은 각 사무국 대표가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²⁵⁾ 따라서 우리나라에 위치하게 될 연구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논의는 결국 연구사무국의 구성이나 인력구조에 대한 논의에 그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결국 사법기관의 연합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소속연구기관을 바라보는 고정된 관점에 따라 사법기관에 소속된 연구기관에게 일차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판에

20) 규약 제22조 제4항.

21) 규약 세부사항 3.3의 내용.

22) 개정규약 제22조 제5항

상설사무국의 구성, 조직, 기능,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주요 목적에 부합하는 상시 목표, 입지 및 재원조달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상설사무국은 이사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상설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공동사무국(Joint Permanent Secretariat) 형태로 구축된다.

행정사무국(Secretariat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한다.

연구사무국(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은 한국에 위치한다.

인적자원개발센터(Center for Train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는 터키에 위치한다.

23) 개정규약 제22조 제4항

상설사무국의 주요 기능은 특정 회원기관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제외한 연합 활동의 기획 및 조율, 회원기관 간 경험 공유의 체계화,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수행, 입헌주의 이념의 확산, 헌법재판기관 활동의 홍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

24) 규약 제22조 제5항.

25) 규약 세부사항 3.6의 내용.

필요한, 또는 관련된 연구를 주로 소속 재판기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제한적 역할만을 수동적으로 수행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사무국을 유치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에서의 역할과 아시아인권 재판소설립을 향한 비전을 고려할 때 연구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을 헌법재판소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그러한 비전 안에서 이해하고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²⁶⁾

연구사무국이 비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기관이고,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구성되고 운영되겠지만, 각 국에 인권보장 및 신장을 위한 동기와 자원을 제공하고, 부담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연구기관에 필요한 일정한 독립성이 단계적으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주지역인권체제의 연구를 담당하는 미주인권 사무국의 기능(권한) 및 성과를 고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 및 신장을 위한 연구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터키에 설치될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연수 프로그램 및 회원기관에 교육자료제공, 전문가직원들의 참석조율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주인권사무국의 교육기능에 관련된 논의는 재판관, 헌법재판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개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교육, 헌법재판기관 외 정부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고려할 만 하다.

Ⅲ. 미주인권체제에서 미주인권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

1. 미주인권체제 개관

미주인권체제²⁷⁾는 정치적 기구로서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와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의 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⁸⁾ 미주인권체제는 다양한

26) 아시아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인권재판소나 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연구사무국의 연구나 운영이 향후 아시아인권체제의 설립이라는 비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사무국의 기능 및 목표, 입지, 재원조달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과 소속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우리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7) 미주인권체제(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또는 “미주인권보장제도는 미주인권선언과 미주인권조약 등 지역인권조약을 근거로 만들어지고 그 기능은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다.” 이형석, 미주인권협약상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2015), 3면.

28) 미주인권체제의 주된 국제문서로 ① 미주기구헌장(Charter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 States), ②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인권선언(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1948) ③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the Human Rights, 1969) ④ 미주고문방지협약(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orture, 1985) 등이 있다. 박경철, 아시아지역의 인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정책개발연구, 2014년, 49-50쪽.

인종, 민족, 종교, 문화를 보유하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계속되는 내란을 겪고 있는 국가 그리고 경제적인 부국으로부터 극빈국까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넓은 스펙트럼에 위치하는 34개의 국가들을 포함한다.²⁹⁾

중남미지역은 지난 19세기부터 지역특유의 국제법 전통을 보유하고(1890년에 이미 미국 국가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 of American Republic) 창설),³⁰⁾ 이 지역에 특유한 지역적 국제법이 성립하고 있음을 자부한다.³¹⁾ 무엇보다 미주국가들은 UN 세계인권선언에 수개월 앞서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을 채택했다.³²⁾ 1959년에 이를 감독할 인권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미주인권협약은 1978년에 비로소 발효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인권보장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아시아에 비해서는 확실히 진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1960년 첫 회기를 개최하였고, 1961년 부터 인권위반의 특수 상황을 조사하거나 개별 국가 내의 인권상황을 관찰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65년 인권위반의 특수한 사건들에 관한 청구 또는 소청들을 조사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³³⁾ 1969년 미주인권협약이 채택되었고, 1978년 발효되었다. 미주인권협약은 미주 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의 권한과 인권침해구제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다.³⁴⁾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을 미주 각 국에서 실효적으로 이행,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³⁵⁾ 197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미주인권재판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미주인권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 쟁송적 관할(contentious jurisdiction)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원회 기타 OAS 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권고적 관할을 행하는 것이다.³⁶⁾ 미주인권재판소는 인권침해 사건을 심리, 판결하며,

29) 홍성필, 『아태지역 인권기구의 설립: 전망과 과제』,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제2권(98.12), 349쪽 참조.

30) “그 밖에 20세기 전반에 있어서도 일반국제법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조약 및 관습상의 실행을 축적하였다.” 이근관, 『미주인권제도에 관한 고찰』,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제2권 (1998), 311쪽. The OAS came into being in 1948 with the signing in Bogotá, Colombia, of the Charter of the OAS, which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1951.

31) 이근관, 위의 글, 310쪽.

32) Henry Steiner and Philip Alst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Oxford University Press (February 29, 1996), 641쪽; 이근관, 위의 글, 310쪽 재인용. 미주인권체제는 1948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미주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창설되었다. 미주인권선언은 일반적 성격의 첫 번째 국제인권문서이다.

33) 개별적인 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출판보고서는 위원회의 연례보고서 또는 각 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34) <http://www.oas.org/en/iachr/mandate/what.asp> (검색일: 2017.1.24)

35) 이형석, 미주인권협약상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에 관한 연구 -미주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제21권 제1호 (2015.3) 236면.

36) 자세한 내용은 이근관, 위의 글, 329쪽 이하. 인권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집중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에 대하여는 간략하게만 소개한다. 또한 미주인권체제에 대하여는 다음 참조:

<http://hrlibrary.umn.edu/instreet/K-zoas3con.html> (검색일: 2017.1.24.).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기구의

미주인권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를 부담한다.³⁷⁾ 미주인권재판소의 인권침해 판결에 대하여 해당 국가가 인권침해행위를 시정하여 판결을 준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³⁸⁾

또한 1980년 7월 30일 미주인권재판소와 코스타리카 정부는 협정³⁹⁾을 체결하여 미주인권사무국(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을 설립하였다. 미주인권사무국은 미주의 인권문제들에 다학제간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교육, 연구 및 인권신장에 헌신된 학문적 성격의 국제적 독립 기구로서 설립되었다. 미주인권사무국의 본부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위치하며⁴⁰⁾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미주체제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⁴¹⁾⁴²⁾ 이하에서는 미주인권기구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미주인권사무국의 목적, 구성, 기능 및 성과를 검토한다.

2. 미주인권사무국

(1) 미주인권사무국의 목적 및 구성

미주인권체제의 연구 및 교육기관인 미주인권사무국(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이하 IIDH⁴³⁾)은 미주인권체제의 두 축인 미주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위원회의 인권 보장과제를 지원한다. 미주인권사무국은 학문적 성격의 자치적인 국제기구로서 오늘날 미주의 문제들에 중점을 두고 학제적 접근을 적용하는 인권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에 있어

회원국 국민으로서 최고의 덕망을 갖추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자로서 본국의 법률 또는 그를 후보로 추천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최고의 사법적 기능행사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법률가 중에서 개인자격으로 선출된 7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2인의 판사가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없다. 재판소의 판사는 6년 임기로 선출되며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미주인권협약 제52~59조 참조. 미주인권재판소는 코스타리카정부와의 1981년 9월 10일의 협약 이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위치하고 있다.(Law No. 6889 of September 9, 1983(setting for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Court.))

37) 이형석, 위의 글, 236면.

38) 이형석, 위의 글, 236면.

39) Law No. 6528에 의하여 승인됨. 1980년 10월 28일.

40) 남미의 미주인권사무국 지역 사무소는 Uruguay의 Montevideo, MERCOSUR Palace와 Colombia의 Bogotá 에 위치한다.

41) 미주인권사무국은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미주인권재판소의 사법행정을 수행하는 사무국은 아니다.

42) 본고의 연구목표와 연구대상인 미주인권사무국의 기능 및 성과 등에 대한 검토와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 연구사무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무엇보다 지면의 한계로 인권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제도사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박경철·이상경의 앞의 글, 홍성필의 앞의 글, 박진완의 앞의 글, 이근환의 앞의 글, 이형석의 미주인권체제 관련 제논문 등을 참조 바람.

43) 또는 IIDH (Instituto Interamericano de Derechos Humanos)라고 함.

서 선도적인 기관이다. 미주인권사무국은 인권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미주체제의 협약(covenants)과 조약(treaties)에 규정된 인권의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미주지역의 선도적인 비정부 및 공적 기관들과 연계하여 인권보급을 위한 지방 및 미주지역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인권에 관한 미주 협약과 미주체제의 다른 조약들에 규정된 인권존중을 신장하고 강화시키고, 교육, 연구, 정치적 중재, 훈련프로그램, 기술적 보조 그리고 전문화된 출판물 통하여 인권에 대한 지식교육의 전파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⁴⁴⁾

미주인권사무국의 활동은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념적 다원주의, 기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다. 미주인권사무국은 국제기구, 특히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뿐만 아니라 미주인권재판소, 인권에 대한 미주인권위원회와 협력하며, 시민사회의 모든 부문 그리고 미주국가들과 동역하고, 인권운동가들과 정부관리 사이의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감당한다.⁴⁵⁾ 그러나 미주인권사무국은 인권침해의 사례를 심사하거나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국제의무 준수의 정도에 대한 결정권도 없다.

미주인권사무국의 General Assembly(총회)는 미주인권사무국의 최고기관으로 미주 인권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미주인권재판소의 재판관들과 미주인권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총회의 구성원이다. 사무국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총회의 열 명의 회원과 미주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미주인권재판소 재판소장(인권위원회와 재판소의 각 위원장과 재판소장은 직무상 권한으로 각각 부위원장과 부재판소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였다)으로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⁴⁶⁾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며 인권국의 프로그램과 활동의 집행을 감독하고 평가한다.⁴⁷⁾

44) 미주인권사무국의 과업 및 전략에 대하여는 다음 웹사이트 참고.

https://www.iidh.ed.cr/multic/default_12.aspx?contentid=0e3f67d3-5a07-4b4a-84fd-a49599990ae9&Portal=IIDHen. (최종검색: 2017.2.28.)

45)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IIHR), Educating in human rights and promoting their enforcement Strategic Framework 2015 - 2020(이하 IIHR 2015-2020 전략적 프레임워크), 6쪽. IIHR의 2015-2020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다음 웹사이트 참고.

<https://www.iidh.ed.cr/IIIDH/media/1641/me2015ing.pdf>. (최종검색: 2017.2.28.)

46)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문서의 25면 미주인권사무국 조직도 참고 바람.

http://pdf.usaid.gov/pdf_docs/pdaci836.pdf (최종검색: 2017.3.31.)

47)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a) 개인구성원: 인권에 관한 전문가들 인권의 방어, 보호, 교육 또는 연구에 헌신된 사람들

b) 명예구성원: 인권을 위해 봉사하는데 특별히 구별된 개인들

c) 동반자(associate): 사무국 규칙이 동반자로 정한 자

d) 후원자: 사무국의 활동을 통한 인권의 명분에 관심이 있고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공적 또는 사적인 개인 또는 집단.(후원자들은 참관인의 자격을 가진다)

이상 미주인권사무국 개정규칙(2004) 제9조의 내용. 다음 웹사이트 참고.

https://www.iidh.ed.cr/multic/UserFiles/Biblioteca/IIIDH/5_2011/7c4dce73-c22c-4660-95c5-1cd0f2

(2) 기능 및 권한

미주인권사무국은 미주인권재판소와 코스타리카 사이에 체결된 구성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미주인권사무국규칙에 의해 규율된다.⁴⁸⁾ 미주인권사무국규칙에 따르면 1) 미주인권사무국은 교육 연구, 인권의 신장 및 관련 학문의 연구를 위하여 국제, 국내, 공적, 사적 수준의 모든 필요한 법적 지위와 능력을 보유하는 자치적인 국제 학술 기구이다; 2) 사무국은 학술, 운영, 재정에서 자치권을 행사한다; 3) 사무국의 위치는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이며, 사무국은 미주의 어느 나라에든지 사무소와 지국을 설치할 수 있다; 4) 사무국은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념적 다원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및 이에 대한 국제적 보호, 학문의 자유 그리고 언제나 어떤 형태의 차별 없이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그 활동의 기반을 둔다; 5) 사무국의 목적은 미주의 문제들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학제간 접근으로 인권교육, 연구 및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다; 6) 사무국은 미주인권재판소의 업무에 그 활동을 연계해야 하며, 미주인권위원회 및 사무국의 원칙을 존중하며 유사하거나 보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다; 7) 사무국은 법적 행위에 관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사무국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⁴⁹⁾

(3) 미주인권사무국의 연구 및 교육기능

미주인권사무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영역에 있어서의 도전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의 발견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분석, 설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미주인권사무국의 연구는 연구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과학적, 방법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며, 외부와 소통하기 용이한, 접근가능한 포섭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제시한다. 또한 인권 이슈에 대한 지식과 중요한 사상 및 이론을 생산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기준점으로서 인권을 사용하며, 연구결과물 역시 인권신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인권의 새로운 측면, 연구, 훈련의 잠재적 영역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미주인권사무국은 인권, 민주주의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구성원 및 정부 관리들의 기술, 역량, 지식을 발전시킨다. 미주인권사무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

e8eef3.pdf. (최종검색: 2017.2.28.)

48) Statute of the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IIHR). 이하 미주인권사무국규칙(1980)의 내용. https://www.iidh.ed.cr/multic/default_12.aspx?contentid=2a68e759-f2e8-4e09-bbcc-2127009cc2b5&Portal=IIDHen. (최종검색: 2017.2.28.)

49) 사무국은 다양한 인권 주제들에 대한 온라인 교육제공, 서적 출판, 전자도서관을 운영, 토론, 컴퓨터 리스트서브를 운영하며 미주대륙에 걸쳐 시민사회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샵을 조직하는 일을 담당한다. 사무국의 온라인 자료들에 더하여 사무국은 도서관의 사용 및 출판물의 구매 등이 연구도움을 구하는 방문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미주인권사무국은 다음 5가지 선상의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① 연구 ② 교육과 훈련(연수) ③ 기술적 보조 ④ 네트워크 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육과 훈련은 의무의 주체와 권리의 주체 편에서 상호 상승효과를 추구하며, 교육 및 훈련의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권 원칙, 기준, 관행을 사용한다. 또한 국내법, 국제인권법 그리고 인간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여러 다른 영역 사이에 필요한 협력과 조화를 조성 및 신장하며, 사무국의 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구와 환경에 적합하고 민감하며, 다양한 형식, 방법, 수단, 자원들을 사용할 뿐 아니라,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적절하고, 시사적이며 수준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 및 교육 방법론과 보급수단을 개발해 왔다.⁵⁰⁾ 미주인권사무국은 미주인권체제에 대한 책, 학술지, 훈련자료, 오디오시청각자료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를 출판하고 배포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파해 왔으며, 사무국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출판되었고, 광범위하게 배포되었다.⁵¹⁾

(4) 미주인권사무국의 성과

1) 설립초기의 권위주의 체제 하의 미주인권사무국

미주인권사무국은 미주지역 대부분이 인권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던 권위주의 체제가 지배하던 시기에 설립되었다. 비록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가 1959년 인권위원회를 창설하고, 1979년에는 인권재판소를 설립하였으나 인권재판소는 1986년까지 한 건의 사건도 심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한 미주체제는 막 시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즉 지역인권기준과 법리가 겨우 만들어지고는 있었으나 국내법으로 포섭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사무국은 처음에는 쿠데타와 선거사기(선거부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자유롭고 정기적인 선거관행과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장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였다. 1983년 사무국은 정치적 권리와 이의 실현을 위한 메커니즘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 신장 및 지원을 위한 센터인 CAPEL(Center for Electoral Promotion and Assistance, CAPEL)을 설립하였다.⁵²⁾ CAPEL은 1985년에 다학제간 학문에 초점을 둔 민주주의 신장과 선거의 기술적 보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시작하여, 지역의 모든 국가에서의 정당 및 시민사회기구, 입법부,

50) IIHR 2015-2020 전략적 프레임워크, 29쪽.

51) 약 1500 여권의 서적, 1985년 이래의 미주인권사무국 학술지의 60 회 편찬 및 뉴스레터 그밖에 여러 자료들이 여기 해당한다. 다음 참조. <http://www.iidh.ed.cr/>. (최종검색: 2017.1.24.) 사법정의에 접근, 직장에서의 정의에 접근(노동권 관련), 소송과정에서 고문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권리, 인권, 여성의 인권, 정치적 권리와 선거, 인권교육, 표현의 자유, 아동과 청소년, 옴부즈맨과 인권, 이주민과 난민, 고문방지,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후손들, 시민안전(안보), 인간안전, 미주체제,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물이 발간되었다.

52) IIHR 2015-2020 전략적 프레임워크, 5쪽. 또한 “일반적으로 법원이 제대로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인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민주정부와 제도화된 권력의 균형이라는 틀이 존재해야 한다.” 음선필, 앞의 글, 566면.

선거기구와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여, 미주인권사무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정립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럼으로써 남미의 민주주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⁵³⁾

미주인권사무국은 또한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는 국가의 국제적 의무로서의 인권이라는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조성하고, 인권의 보호, 수사, 소청절차와 관련한 사무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사무국의 활동들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대물림한 심각한 폭력 하에 있는 지역, 국가들에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맥락에서 행해진 것이다. 1983년 사무국은 인권의 보호와 민주적 제도 그리고 복지제도의 설립과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조직, 공공기관 그리고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을 훈련하고, 실무경험을 교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례의 그리고 여러 전문분야를 아우르는 소통공간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학제간 과정’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사무국은 미주지역에서 인권운동분야와 국가인권어젠다의 혁신과 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가의 수렴점으로서 인식되는 학문적 특화를 위한 상징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사무국은 또한 인권, 특별히 형벌제도와 원주민들에 대한 선구적인 인권 연구를 출판하였다.⁵⁴⁾

2) 민주주의 전환기의 미주인권사무국

다수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학살, 약식처형, 강제실종과 같은 인권에 대한 엄중하고 조직적인 침해를 거의 완전히 중지했던 “불충분한 민주주의들”로 특징 지워지는 기간 동안에도 사무국은 활발한 활동을 수행했다. 대부분의 무장분쟁의 평화협상과정이 시작되었고, 국제법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이 생겨났다. 그러나 많은 정부들이 여전히 경찰 폭력, 고문, 적법절차의 부족, 형무소의 열악한 환경,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요구에 대한 무반응,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과 같은 인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치안의 불안(insecurity)을 통제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정책을 사용하였다. 선거에 의해 획득한 권한을 이용하여 권력의 남용을 정당화하고, 정부에 대한 제한을 유보하면서, 국민의 비판에 대하여는 권위주의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주인권사무국은 진정한 민주적 국가 제도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완전한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미주인권사무국은 과도기적 정의, 국가적 화해와 평화협상과정에서의 진실과 정의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사 및 연구, 또한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역량을 개선시키고 국가기

53) 선거와 관련한 미주인권사무국의 활동에 관하여 다음 문서 참고.

http://pdf.usaid.gov/pdf_docs/PDABC925.pdf. (최종검색: 2017.2.28.)

54) 이상 IIHR 2015-2020 전략적 프레임워크, 5-6쪽.

구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⁵⁵⁾

3) 민주주의 공고화 시기의 미주인권사무국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 미주인권사무국은 학문적 외연을 확장하고, 명확하게 했다. 미주인권사무국은 여러 분야들 중 난민, 유민 그리고 피송환인(1988), 원주민(1990), 여성의 권리(1992), 경찰과 군인을 포함한 안보병력(1992), 그리고 옴부즈맨(1993)을 위한 최초의 지역 특화된 활동과 훈련을 개발했다. 또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제1회 미주 과정을 설립했으며(1987), 시민사회와 인권에 대한 제1회 미주 과정(1988)을 설립하였다.⁵⁶⁾ 최근에는 완성된 미주인권보호체제의 존재, 다양한 국제문서(법)와 메커니즘, 시민사회조직의 활동 그리고 정당하게 성립된 민주주의의 보급 덕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미주지역의 인권침해와 사법정의 구현에서의 실패 역시 계속되었다. 폭력과 불안정이 확대되었고, 차별, 빈곤, 불평등은 지속되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역할 및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었다.

4) 21세기 미주인권사무국의 성과 및 비전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처음 10년 동안 미주인권사무국은 포섭적이고 투명한 정치시스템을 증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중의 참여와 건전한 거버넌스를 조성하면서, 차별, 사회적 배제 그리고 빈곤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영역들은 4개 그룹의 권리들의 신장 -정의와 안전, 정치적 참여, 인권교육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의 효과적인 이행 - 및 이에 더하여 세 가지 범분야(cross-cutting)의 주제-성평등, 민족적 다양성의 인식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상호작용의 신장-에 기초하여 선택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 주목할 만한 미주인권사무국의 성과 중에는 사법집행자의 훈련, 시민위험에 대한 연구, 군인, 경찰, 그 밖에 치안담당기구의 훈련, 선거기구들에 대한 기술적 보조, 인권 교육을 위한 방법론 및 교육과정의 개발, 인권교육상태 및 진보지표의 조직적 모니터링에 의거한 다른 관련 주제에 대한 응용연구, 원주민,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공동체 및 여성들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다.

2000년 미주인권사무국은 미주기구의 요청으로 인권을 강화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계획을 설립함으로써 미주체제의 보조 학문 기구로서 자신의 지위를 정비하

55) 상세한 내용은 IIHR 2015-2020 전략적 프레임워크, 6쪽 이하 참조.

56) 각각의 과정이 벌써 16번, 그리고 7번의 해당 과정이 수행되었다. 이 시기의 특별히 성공적인 경험 중에 “중앙아메리카의 시민안전”(Citizen Security in Central America)프로젝트(1998-2000)의 일부로서 니카라과 경찰 연수가 있다.

였다. 동시에 미주인권사무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객관성을 통하여, 희망하는 목표,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인권진보지표시스템을 고안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⁵⁷⁾ 인권에 대한 응용연구의 발전에 초점을 둔 결과, ‘인권으로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보급하고 보장함에 있어서, 그 진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인권교육에 대한 11개의 미주보고서가 출판되었다. 2005년에는 국가기구를 위하여 첫 번째 지역 훈련 프로그램을 설립함에 의해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의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었고, 2014년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미주체제의 이용에 대하여 정부 관리들을 교육하는 특성화된 과정이 일곱 번째로 개설되었다. 또한 미주인권사무국은 국가들이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2002-2013).⁵⁸⁾ 더 나아가 교육과정 및 방법적 프로포잘(Curricular and Methodological Proposal)으로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들의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⁵⁹⁾

2007년 이래로 미주인권사무국은 시민사회조직의 역량, 미주체제의 원칙과 활동, 포섭적인 공공정책과 개발전략을 고안함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고려하여 인권위반의 원인과 결과로서 ‘배제와 빈곤’의 문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주인권사무국은 빈곤에 의해 야기된 인권침해의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변호사, 비정부기구, 그리고 다른 기관들의 훈련 및 다제간 대화의 조성, 인권의 관점에서 빈곤의 이슈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 합의 기준들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 배제된 인구에 속하는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시민적 역량을 발전시키도록 이러한 아동들의 인권교육을 신장하는 다양한 계획들을 계속하여 개발하였다.⁶⁰⁾

같은 맥락에서 일련의 미주 교육부장관 회합(2007-2013)은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의 이행을 위한 교육부장관들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고위 수준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로 미주기구 총회는 결의⁶¹⁾를 통하여 이 분야에서 미주인권사무국 계획의 일부인 인권교육에 대한 미주협약을 인준하였다. 이 협약은 세 요소를 통한 인권 교육과 교육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적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인권교육의 사법적, 정치적, 교육학적 지지를 위한 장치로서의 세 요소란 i)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의 법적 인식, ii) 교육에 있어서 공공정책의 개발, 그리고 iii)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교육학적 조건과 자원들

57) IHR, 2015-2020 전략적 프레임워크, 7쪽.

58) 예로서 19개 국가의 인권교육에 관한 미주인권사무국의 다음 보고서 참고.

<http://www.hrusa.org/workshops/HREWorkshops/usa/FullReportChile.pdf>. (최종검색: 2017.2.28.)

59) 상세한 미주인권사무국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문서 참조.

http://pdf.usaid.gov/pdf_docs/pdacf028.pdf. http://pdf.usaid.gov/pdf_docs/pdacj394.pdf.

(최종검색: 2017.2.28.)

60) 상세한 미주인권사무국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 문서 참조.

http://pdf.usaid.gov/pdf_docs/pdac1461.pdf.

http://pdf.usaid.gov/pdf_docs/Pdadm268.pdf. (최종검색: 2017.2.28.)

61) Resolution AG/RES. 2604 (XL-0/10)

의 강화이다.⁶²⁾

위와 같은 미주인권사무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주지역의 인권에 대한 도전은 여전하다. 라틴아메리카는 빈곤률이 어느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ECLAC에 따르면 33.1%에서 29.91%로 감소(2013)),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⁶³⁾ 게다가 범죄활동과 폭력의 증가, 그리고 언론, 이주민, 인권옹호자들에게 가장 위협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존중이 결여된 조치들이 있었고,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심각한 우려도 계속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미주인권사무국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가 인류의 위기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선포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주인권사무국은 2011년에서 2014년 “민주적 미래로의 열쇠인 교육”이란 전략을 고안했는데, 인권에 대한 교육이 교육의 권리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존엄성을 가진 삶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배치되었다.⁶⁴⁾ 따라서 미주인권사무국의 활동들은 인권교육권의 법적인식을 조성하고, 인권옹호자, 교육자, 관리, 정책결정자를 훈련하며, 특히 취약한 집단과 관련하여 미주 사법제도에의 접근을 강화하고, 선거기구의 역량을 평가하고 지원함으로써 선거과정을 강화하고, 미주체제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각 국가의 준수에 관한 개선지표 모니터 및 추적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주인권사무국은 2013년 ‘인권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의 미주 회담(Inter-American Consultation on the Status of Education in Human Rights)’의 일부로서 인권 교육과 교육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국가, 광역, 그리고 미주지역 전역에 대한 미주인권사무국의 진도보고서(progress report)를 발간하였다. 미주인권사무국은 또한 희생자를 위한 통합적 주의 및 보상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Government of Colombia’s Unit for the Integral Attention and Reparation for Victims (2013-2014)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발전시켰다. 이 협정은 무장분쟁의 피해자들을 손해배상에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인적, 재정적 노력과 평화협상과정의 부분으로서 피해자들을 훈련하고 강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미주인권사무국은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인권에 대한 다제간 교육과정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⁶⁵⁾

62) 미주인권사무국의 두 지부가 설립되었는데, 남아메리카 지역 사무소(2008) 그리고 콜롬비아 사무소(2009)이다. 두 지부 모두 사무국의 지역적 활동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이에 선행하여 과테말라 연락사무소(1998)가 “과테말라 필수계획(Integral Plan for Guatemala)”과 협력 및 보충적인 활동에 대한 지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63) IHR 2015-2020 전략적 프레임워크, 8쪽, fn. 2: The number of Latin Americans in situations of poverty in 2013 climbed to some 164 million (27.9% of the population), of whom 68 million were in extreme poverty (11.5% of the inhabitants of the region), according to projections furnished on December 15, 2013 by th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ECLAC).

64) IHR 2015-2020 전략적 프레임워크, 8쪽.

65) 브라질(2012, 2013, 2014년)과 그리고 콜롬비아(2013)에서 인권에 대한 다제간 교육과정이 있었다.

위와 같이 미주인권사무국은 2000년 이래로 미주체제의 인권으로서의 인권교육이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해왔으며, 인권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영역으로 인구의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강조와 함께 참여, 안전 그리고 사법정의에의 접근들에 강조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미주인권사무국은 빈곤과 관련한 인권문제를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고려를 초월하여 윤리적, 법리적인 관점에서,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영역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⁶⁶⁾

IV. 미주인권체제 및 인권사무국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의 역할 및 비전과 관련한 시사점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이 있긴 하지만, 지역별, 인권별로 조약이 체결되고, 지역인권보장체제가 성립한 것 같이 개별인권의 확실한 보호를 위하여 아시아 지역의 지역인권보장체제(비록 당장 아시아 전역을 포섭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동북,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의 권역별로 또는 헌법재판소나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⁶⁷⁾ 실제적인 재판규범으로서의 인권의 정립에 있어서 미주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미주인권재판소는 판결을 통하여 진보적인 인권판례법을 발전시켜왔으며, 인권위원회는 주제별 보고서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역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⁶⁸⁾ 미주인권체제는 다양한 인권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배상정책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 상징적 배상(기념비 등) 뿐만 아니라

66) 위의 글, 9-10쪽. 또한 IIHR, The Strategic Framework 2011-2014(이하 IIHR 2011 전략적 프레임워크) 참조. 미주인권사무국의 2015-2020 전략적 계획에 따르면 기능적이고 포섭적인 민주주의, 투명하고 참여적인 제도적 조치, 접근가능하고 효과적인 사법정의제도, 인권 및 인식되고 가치있는 다양성에 대하여 존중하는 안보의 원칙 및 관행을 추구함에 의해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향유를 획득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 및 우선순위로 하고, 개입전략으로써 인권으로서의 교육과 인권의 효과적인 이행의 촉구라는 모토에 기초하고 있다. IIHR 2015-2020 전략적 프레임워크, 15쪽. 인권 교육(인권교육 및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과 인권 신장은 각 전략적 우선순위를 위한 기반이며 방향을 제공한다. IIHR 2015-2020 전략적 프레임워크, 15쪽 표 참조. 미주인권사무국은 전략적 계획 내의 연구원의 전체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영역들로 시민사회-국가 상호작용(Civil Society-State Interaction), 성평등(Gender equality),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를 제시하고 있으며, 업무의 초점으로 인권의 상호의존성, 인권기반 접근법, 결과기반 관리 접근법을 강조한다.

67) 홍성필, 앞의 글, 344쪽 이하 지역적 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 참고.

68) Par Engstrom,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Notable Achievements and Enduring Challenges (September 2015). Forthcoming in Contemporary Challenges for Understanding and Securing Human Rights in Practice edited by Corinne Lennox.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670050>, 141-42쪽.

국가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사인인 인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소추의 요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⁶⁹⁾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지역적 인권체제의 설립과 이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인권기구 및 인권규범 이전에 OAS와 같은 지역기구의 역할을 하는 아시아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범정부기구는 지역 내 국가정부의 인권탄압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국가 정부 및 다국적기업에 의한 지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인권체제는 국가의 관행(practice)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미주인권위원회의 경우 미주인권선언이 1948년에 채택된 직후의 설립 초기와 비교하면 극적으로 변화되었으며, 미주인권재판소와 함께 미주인권체제는 현재 건전하고 자치적인 체제로 발전해 왔다.⁷⁰⁾ 미주인권위원회는 개별사건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한 공개, 공개청문, 장소방문(on-site visit), 잠정적 조치(precautionary mechanisms)와 같은 공적 외교로부터 은밀한 정부 관리와 개인청구자와의 협상까지 상당히 포괄적인 도구를 개발해 왔으며, 미주인권체제는 인권NGO 들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간접적인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⁷¹⁾ 그 밖에 미주인권체제는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 이행(compliance)보고서 등과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국가들을 인권위반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하여 개발하였다.⁷²⁾ 또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각 국가별로 혹은 하부지역단위별로 상이한 법제도와 인권의식 등으로 인권보장수단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와 포섭, 관용의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중국적으로 지역적 차원의 강한 법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통합이 실현될 수 있게 한다.⁷³⁾ 이를 통하여 회원국 사이의 강한 결속을 실현하고, 지역적 인권보장체제가 궁극적으로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실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⁷⁴⁾ 또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 내의 국가들은 자국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판단을 인권보장기구에 의하여 받지 않기 위하여도 국내 인권보호제도를 강화하게 된다.⁷⁵⁾ 물론 미주인권협약 체약국 중 미주인권위원회나 미주인권재판소 결정에 반대하여 미주인권협약을 탈퇴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⁷⁶⁾ 여

69) Par Engstrom, 앞의 글, 142쪽.

70) 위와 같음.

71) 위와 같음.

72) Par Engstrom, 위의 글, 142쪽. 또한 미주인권위원회의 국내정치에 대한 초점은 미주인권시스템이 점증적으로 미주지역을 아우르는 특수한 인권이슈에 대한 국내정책과 입법적 논쟁으로 포섭되어 가는 방법을 강조한다. 이것은 개별사건의 논쟁적인 소송에 대한 지배적인 초점으로부터 벗어나 우호적인 조정(settlement) 절차를 통하여 사건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점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73) 위와 같음.

74) 위와 같음.

75) 박경철·이상경, 앞의 글, 91-92쪽. 또한 이형석, 미주인권협약상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에 관한 연구, 261면.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준수명령 이행사례에 대하여 이형석, 같은 글, 247면 이하 참조.

76) 그러한 이유로, 1999년에는 트리니다드토바고, 2013년에는 베네수엘라, 2014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이 탈퇴선언을 함. 이형석, 위의 글, 260면.

러 지역의 인권협약과 이의 실질적 이행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인권보장기구 등의 설립을 통한 성과를 볼 때, 아시아 지역에 인권보장과 신장을 위한 지역인권체제 및 지역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⁷⁷⁾

둘째, 현 상황에는 아시아에 지역인권보장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 사정에 맞는 인권과 인권교육의 정립 및 실천을 위한 인권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아시아 인권연구기관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우리나라에 설치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이 담당할 수 있다. 박경철, 이상경은 아시아 지역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추진방법으로 여러 지역의 지역인권보장체제를 검토하여 4단계의 추진과정을 제시하는데, 1단계가 공통의 인권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 2단계가 지역적 정치기구 구성, 3단계 인권공동체 형성(인권헌장 또는 협약과 인권위원회 설립), 4단계 인권재판소 구성⁷⁸⁾이다. 지역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추진과정의 전 단계에서 바로 연구사무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적 인권기구는 인권문화의 진흥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심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며,⁷⁹⁾ 특히 미주지역에서는 미주인권사무국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역인권기구와 지역에 특유한 인권연구기관은 무엇보다 선진국들에 의하여 소홀히 되어 온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지역 내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뿐 아니라 미주인권사무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지역의 특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형편을 고려하기에도 적합하다.⁸⁰⁾ 그리고 아시아헌법재판소의 연구사무국은 먼저 정치적인 의미의 인권이 아니라 인권이 각 국의 헌법에 구체화된 기본권과 기본권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의 인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에 설립될 사무국이 연구기능만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판사, 연구관, 사법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은 제외하더라도(터키에 설치되는 인적자원센터가 연수기능을 수행하므로), 군, 경찰, 기타 보안관련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보호 및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미주인권사무국과 같이 대 국민, 대 비정부기구 등에 대한 인권교육의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사무국이 비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기관이고,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구성되고 운영되겠지만, 현재 아시아인권보장기구가 없는 시점에 각 국에 인권보장과 신장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및 이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연구사무국에 필요한 독립성과 자치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사무국의 효율적인 활동과 여러 국가들의 협조를 위하여 연구사무국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초기 단계의 연구사무국은 아시아 각 국의 공통된 인권 특히 정치적 기본권 보다 오히려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인간의 생존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우선

77) 이형석, 미주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사회권에 관한 연구, 180-81면 참조.

78) 박경철, 이상경, 앞의 글, 79면 이하.

79) 홍성필, 앞의 글, 345쪽, 지역적 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 참고.

80) 위와 같음.

적으로 연구, 교육, 신장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인권보장에 국가들이 적대적이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미주인권사무국의 경우 설립초기에 선거의 공정,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한 연구와 교육을 시작으로 강제실종, 학살, 평화구축,⁸¹⁾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연구로 주제를 확장시켜 나갔지만, 아시아의 경우 미주와 달리 미주기구와 같은 배경이 되는 정치적 연합기구나,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각 국의 다양한 상황이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략적, 단계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초기 단계의 연구사무국은 위와 같은 인권의 실체적 연구와 함께 아시아인권재판소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향후 설립될 재판소의 권한(관할), 기능, 인적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재판규범 및 재판절차, 재판소 설립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행정적, 외교적 로드맵)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⁸²⁾

넷째, 연구사무국이 아시아 각국 내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회원국들의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시민단체, 학자, 법관, 관련 공무원들의 연구사무국에의 파견 및 공동연구가 필요하다.⁸³⁾ 또한 이와 함께 아시아 각국 내지 회원국들의 사법제도, 헌법재판의 역사, 판례에 대한 연구,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⁸⁴⁾ 또한 “아시아 각국을 상대로 하는 인권보장사례에 대한 공동연구 및 사례 소개” 등을 통하여 공통의 인권관념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⁸⁵⁾ 또한 미주인권사무국이 각 국의 인권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및 독자적인 계획과 프로젝트로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힘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사무국의 각 국의 인권위원회나 인권 및 헌법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인권관련 교육, 연구 및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⁸⁶⁾

마지막으로 미주인권보장체제의 선구적인 역할, 비전과 활동에 비해서 아직 남미의 인권보장의 현실은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에 관하여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던 유럽지역에서는 인권규범과 인권현실간의 간극이 좁은데 반하여 미주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⁸⁷⁾ 이에 대하여 유럽 전 지역이 인권과 법치주의 또는

81) 같은 취지로, 류성진, 『지정토론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설립·운영방안의 모색』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헌법재판소 공동학술대회, 2016. 11. 4.

82) 노회범, 『지정토론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설립·운영방안의 모색』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헌법재판소 공동학술대회, 2016. 11. 4.

83) 노회범, 위의 글.

84) 노회범, 위의 글.

85) 박경철, 이상경은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으나(박경철, 이상경, 앞의 글, 90면), 저자는 이러한 역할을 연구사무국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86) 같은 취지로, 노회범, 류성진, 위의 글.

87) 이근관, 앞의 글, 332-33쪽.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의 전통을 보유한 반면 미주지역에서는 그러한 전통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발견하기도 한다.⁸⁸⁾ 또한 유럽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이 지역 시민들의 삶의 수준에 비하여 미주 지역은 오랜 식민지경험 등으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높은 대외의존도, 소수엘리트에 의한 정치 및 부의 독과점,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차별, 갈등 등의 문제 상황을 통하여 이 지역의 인권보장체제와 현실 간극의 원인을 설명하기도 한다.⁸⁹⁾ 그 밖에 “시행조치에 관해서는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 사이의 상호협력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⁹⁰⁾ 즉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보호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에서 인권보호, 법의 지배 등 시민사회적 전통이 존재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며, 또한 인권문제가 정책적 수단이 아닌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⁹¹⁾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아시아인권체제의 설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과연 담당해야 할 연구사무국은 미주지역과 유사한 아시아지역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면서 궁극적인 아시아인권체제의 설립이라는 비전과 방향성을 고려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여러 국가들이 인권운동가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지만, 또 여러 국가들은 자신들의 외교정책을 통하여, 또한 국제기구에서 인권을 옹호한다.⁹²⁾ 이러한 국가들의 영향력은 조약을 초안하고 비준하며, 다자간 기구를 창설하고 인력을 파견하며, 위반자들을 모니터하고 제재하며,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자원을 감독하고(directing), 평화협정을 이행하고,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초국가적 계획을 촉진하고, 권리의 새로운 이해를 글로벌어젠다에 도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수 있다.⁹³⁾ 미주인권체제가 형성될 당시 중남미 국가에는 독재적 성격의 권위주의 정부가 많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가 속해 있는 코노 수르/코니 술(Cono Sur/Cone Sul) 국가들은 미주인권재판소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이들 반대하는 국가를 제외한 타 국가들

88) 위와 같음.

89) 이근관, 앞의 글, 333쪽. 중남미 지역의 인권실태가 지체된 것은 냉전시대와 맞물린 미국의 ‘소위 인권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이 인권정책을 인권의 대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에서 국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권문제를 활용하는 정책으로 파악한 것. 이근관, 앞의 글, 334쪽.

90) 이형석, 미주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사회권에 관한 연구-미주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통권 제43집 2014년 12월, 163면.

91) 이근관, 앞의 글, 335쪽.

92) Alison Brysk, 앞의 글, 445-446쪽.

93) Alison Brysk, 앞의 글.

의 지지에 힘입어 미주인권재판소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남미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민주정부를 유지해 온 코스타리카에 미주인권재판소가 설립되었다.⁹⁴⁾ 코스타리카는 국제인권체제에서 중요한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인권체제, 즉 인권조약, 인권기구, 그리고 인권의 이행에 있어서 미주인권체제의 중요한 지지자의 역할을 해왔으며, 미주인권재판소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미주인권사무국(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의 설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주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사무국을 코스타리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⁹⁵⁾ 코스타리카의 헌법재판은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헌법재판제도가 국가생활전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일찍이 발전한 편이기도 하였다.⁹⁶⁾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헌법재판제도의 절차적 우수성과 다양한 판례의 축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왔다.⁹⁷⁾ 우리나라에 올 1월 설치된 연구사무국의 조직 및 구성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공개되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사무국의 조직, 기능 및 성과는 후속 연구과제이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연구사무국은 우선 각국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주지역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설립된 미주인권체제의 인권사무국은 그 지위와 기능, 목표와 전략, 시작점과 주안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주인권사무국에 대한 검토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연구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시사점을 제시할 뿐 아니라, 연구사무국이 단계적으로는 아시아 각국의 헌법과 헌법에 실정화된 인권인 기본권의 보장과 보호, 궁극적으로는 아시아인권보장체제의 설립이라는 비전과 이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연구를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연구사무국을 통하여 Alison Brysk이 말하는 글로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하는가? 될 수 있을까?

그 과정에 어떤 도전과 한계를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든지 연구사무국의 설치가 그 위대한 시작일 수도, 아니면 전부, 즉 마침일 수도 있겠다.

94) 호베르토 까우다스, 세미나발표문, 미주인권재판소장 초청강연토론회, 헌법재판소, 2016. 7.15. 31쪽 이하.

95) Alison Brysk, 앞의 글, 449쪽.

96) 음선필, 앞의 글, 567면. 남미의 다수 국가는 인종적 갈등, 특정 권력집단에 의한 헌법의 도구화, 공무원이나 법관의 열악한 양성체계와 소액의 보수지급 등과 이로 인한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97) 이형석, 미주지역에서 선주민족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6.6), 325면 참고.

참고문헌

- 노희범, 『지정토론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설립·운영방안의 모색』,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헌법재판소 공동학술대회, 2016. 11. 4.
- 류성진, 『지정토론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설립·운영방안의 모색』,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헌법재판소 공동학술대회, 2016. 11. 4.
- 박경철·이상경,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 현황과 인권보장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2015.3)
- 박진완, 국제적 헌법주의의 실현형태로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 유럽헌법연구 15호, 2014.6, 134면. <http://www.humanrights.asia/> (최종검색: 2017.2.27.)
- 박한철, 아시아 지역의 기본권 신장과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박영사, 2016.
- 음선희,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0.
- 이근관, 미주인권제도에 관한 고찰,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제2권 (1998)
- 이준일, 아시아 지역인권보장체계 설립 방안 -유럽인권재판소 모델의 아시아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2호, 2015.8.
- 이형석, 미주지역에서 선주민족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6.6)
- _____, 미주인권협약상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에 관한 연구 -미주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제21권 제1호 (2015.3)
- _____, 미주인권협약상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2015)
- 조재현, 인권보장제도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제도의 의의와 한계, 헌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8.6)
- 홍성필, 아태지역 인권기구의 설립: 전망과 과제,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제2권 (1998)
- 호베르트 카우다스, 미주인권재판소장 초청강연토론회 자료집, 2016.7.15.
- Alison Brysk, Global Good Samaritans? Human Rights Foreign Policy in Costa Rica, Global Governance 11 (2005)
-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nual Report 2015
-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Strategic Plan 2011-2015 Part I, 50 years Defending Human Rights: Results and Challenges
-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IIHR), Educating in human rights and promoting their enforcement Strategic Framework 2015 - 2020
-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IIHR), The Strategic Framework 2011-2014
- Par Engstrom,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Notable Achievements and Enduring Challenges (September 2015). Forthcoming in Contemporary Challenges for Understanding and Securing Human Rights in Practice edited by Corinne Lennox.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670050>
- 현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 기사입력 : 2017.01.03. 10:35

(최종수정 2017.01.03 10:35)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0103102827883745301_12

(최종검색 2017.1.24.)

투고일자 : 2017. 03. 10

수정일자 : 2017. 03. 30

게재일자 : 2017. 03. 31

<국문초록>

미주지역 인권보장을 위한 미주인권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소고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의 아시아지역 인권보장을 위한 비전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 -

유 은 정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은 향후 아시아인권체제의 설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연구사무국의 연구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에서 연구사무국의 기능 및 목표, 입지, 재원조달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연구사무국이 비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기관이고,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구성되고 운영되겠지만, 아시아인권보장기구가 없는 현 시점에 각 국에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자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독립성과 자치 권한이 단계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지역인권체제, 특히 미주지역의 인권보장기구의 연구를 담당하는 미주인권사무국의 기능 및 성과에 대한 고찰이 궁극적으로 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 및 신장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설치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적 인권보호체제의 설립 뿐 아니라 효과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지역 내에 각 국가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보장을 위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제1세대 인권 뿐 아니라 제2세대 인권인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서도 각 국가와 지역체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요구된다. 따라서 연구사무국은 인권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지역의 인권체제의 설립과 보장을 위하여 또한 전 단계로서 인권의 개념 및 인권보호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인권보호기구 뿐만 아니라 각 정부, 시민단체와의 연구, 교육, 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미주인권사무국, 헌법, 인권, 헌법재판소